

[보도자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13. 노동자·시민 대행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5월 14일(목) 11:00

○ 장소: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선포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6.05.14(목) 11:00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 오는 6월 13일(토) 경남 창원에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진보정당 등이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진행된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등 기후, 에너지운동 및 사회운동의 주요 연대체들과 진보정당이 발전노동자 등 민주노총과 함께 주최하는 이번 대행진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내걸고 전국에서 창원으로 모이는 기후정의버스 조직화와 함께 진행된다.
- 오늘 5월 14일(목)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된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본격화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대안으로 발전노동자 총고용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이 “공공성 강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가 차별과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확정된 가운데 작년 12월 충남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폐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경남 하동 1호기를 필두로 2040년까지 61기 모두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하지만 지역사회 보전 방안은 물론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 발전 노동자의 고용 문제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경남과 충남 지역의 경우, 고용 문제와 함께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발전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발전소 폐쇄에 기꺼이 동의하고 있지만, 고용 대책은 노동자의 몫으로 떠넘겨지다시피 한 상황이다. 또한 발전 공기업들에서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대부분이지만, 이 발전소의 폐쇄가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이미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의 95% 이상이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60% 이상은 해외 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에너지 산업 전반의 민영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 오늘 기자회견 인사말을 통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기후위기의 대책은 당장의 이윤이나 효과보다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며, “노동자 시민이 만들고자 하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함께사는 공동체를 위해 6월 13일 창원으로”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 6.13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의 취지를 소개한 기후정의동맹 해미 집행위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하나의 산업 전체가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첫 번째 과정”이라며 “이 전환이 누구의 참여 속에서, 누구의 삶과 권리를 지키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의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쇄의 부담”이 “발전소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더욱 크게 떠넘겨지고 있다.”며,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전환이

또 다른 위험의 외주화, 또 다른 해고와 배제의 핑계가 되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 이번 대행진의 주관조직이며, 발전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은 수노조의 고기석 수석부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이 민영화 완성으로 연결” 되는 상황을 비판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26조 중 재생에너지 관련 추경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즉 민간의 시설 투자에 지원되는 것으로서 민영화의 기반을 닦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 공동주최에 함께하고 있는 진보정당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노동당의 고유미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불가피” 하지만 “재생에너지 전환의 이익이 민간기업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로 돌아와야” 하며, “발전노동자의 충고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 주장했다. 녹색당의 이상현 공동대표는 “신규 핵발전소 건립이 아니라 신속한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이야말로 “정부가 마땅히 가야할 길” 이라 주장했다. “에너지 전환은 민간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생존을 위한 공공의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이호성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대안” 은 “노동과 민주주의가 있는 에너지 전환” 이라며, 정부가 화답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의 정주원 기후위기대응특위장은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발전노동자 충고용보장” 이야말로 “진짜 에너지안보이자 진짜 에너지 안전망, 누구도 저버리지 않는 전환” 이라고 이야기하며, “노동자와 서민의 삶부터 공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을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현장 노동자 발언에 나선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5개 발전 공기업의 통합이야말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 이라 밝혔다. 또한 민자 발전소의 이익 보장은 결국 국민의 손해일 뿐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공공 재생에너지 건설에 투자” 할 것을 촉구했다. 태안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한전KP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인 정철희 한전KPS발전비정규직 지회 태안분회장은 “발전소 폐쇄 시기에 맞춰 책임져야 할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 하며 “현장 밖으로 밀어내는” 작태를 비판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해고의 외주화” 를 넘어 원청 직접 고용과 김충현협약체의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윤 중심의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 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재생에너지’ 로 전환” 하고 “수십 년간 화력발전소를 지켜온 숙련된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의 핵심 인력으로 전환 배치” 하는 것이 “에너지 공공성을 지키는 진짜 정의로운 전환” 이라 주장했다.
- 참가자들은 6월 13일(토) 경남 창원,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에 전국에서 기후정의버스로 달려와 줄 것을 요청하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충고용 보장” 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힘을 함께 모을 것을 다짐했다. 2025년 경남 창원과 충남 태안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린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에는 전국에서 11대의 기후정의버스를 타고 2,000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참가한 바 있다.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기후위기비상행동 이지언 집행위원
- 인사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대행진 취지와 소개: 기후정의동맹 해미 집행위원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이선미 (참여연대 간사)
- 현장 발언
 -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
 -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
- 공동주최·주관단위 발언:
 -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
 - 진보정당: 노동당(고유미 공동대표), 녹색당(이상현 공동대표), 정의당(이호성 사무총장), 진보당(정주원 기후특위장)

[붙임 자료]

1. 기자회견문
2.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3.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기획안
4. 6.13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 포스터
5. 6.13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 서울 기후정의버스 안내

[문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이지언 집행위원(010-9963-9818)
기후정의동맹 은혜 공동집행위원장(010-3337-3409)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석(010-3237-5940)
공공재생에너지연대 후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010-9130-1848)

[붙임 1: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에너지위기로 심화되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노동자 시민이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기후위기,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 시민은 해를 더 할수록 심각해지는 폭염과 폭우, 이상 기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 왔던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온도상승 1.5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탕감할 수 없는 빚을 만들어 왔습니다.

에너지 위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에너지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벌인 전쟁은 전 인류의 비극이지만, 가난하고 소외 받는 계층일수록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에서 시작된 차별과 불평등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 신속하고 더 과감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 속의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른 나라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축 속도 역시 초기에 더 가파르게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더 신속하고 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고작 10% 남짓입니다. OECD 평균 35%에 비하면 1/3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태안 1호기 폐쇄를 계기로 38년까지 단계적으로 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에너지위기를 생각한다면 이 역시 매우 느리고 더디기만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화력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투자는 더디고, 발전소 폐쇄로 피해를 보는 발전노동자와 지역 사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90% 이상이 민간발전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화력발전에 집중된 공공 발전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해외투기 자본과 거대 자본이 투자한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이 들어설 것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방임함으로써 전력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화력발전이 완전히 폐쇄되는 2040년이 전력 민영화 완결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정권을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린 것처럼 더디고 느리고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에너지 전환 정책 역시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이미 발전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불안을 감수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했습니다. 시민들은 기후특위 공론화를 통해 신속하고 담대한 전환에 찬성했습니다. 해를 이은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을 통해 거리에서 함께 만난 노동자 시민들은 지난해 공공재생에너지 5만 입법 청원도 성사시켜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노동자 시민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또 다시 대행진을 진행합니다. 2026년 6월 13일, 경남 창원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모여,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합니다. 본격화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대안으로 발전노동자 총고용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이 자본의 이윤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되지 않도록 공공성 강화를 요구합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가 차별과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과 확대를 요구합니다.

6월 3일 창원으로 가는 기후정의버스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크고 더 멀리 갈 동력이 될 것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전환과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쟁취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4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13 노동자·시민대행진 선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붙임 2: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 인사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우리는 올해도 6월13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대행진을 진행합니다.

작년 총남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경남하동 1호기 등도 폐쇄일정에 올라있습니다.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흐름은 이후에 가속화 되겠지만, 공공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동자 시민이 나서서 대행진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지금입니다.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무더위, 최악의 열대야, 집중호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자연스레 기후위기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우려와 걱정은 지속되는데 대안은 자리잡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노동자 시민이 앞장서 바꾸어 내고자 합니다.

미국의 베네주엘라 침공이나 이란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에너지 패권을 위한 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 조건에서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마저 자본의 먹잇감으로 민영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화석연료의 전환에 노동자의 일자리도 지역사회의 붕괴도 뒷전인 실정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권한이 민간 자본에게 넘어가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으며 지역사회는 소멸하는 최악을 막기위해 노동자 시민이 나서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의 대책은 당장의 이윤이나 효과보다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노동자 시민이 만들고자 하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함께사는 공동체를 위해 6월 13일 창원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대행진에 함께합시다.

○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 취지와 소개: 기후정의동맹 해미 집행위원

안녕하세요, 기후정의동맹에서 활동하는 해미라고 합니다. 투쟁!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안 1호기에 이어, 하동 1호기도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십 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산업 전체가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첫 번째 과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른 산업 전환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전환이 누구의 참여 속에서, 누구의 삶과 권리를 지키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의 기준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당장 정부와 발전 공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전환은 어떻습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발전소 폐쇄는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그 안에서 일하던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은 어떻게 할지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폐쇄의 부담은 발전소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더욱 크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전환이 또 다른 위험의 외주화, 또 다른 해고와 배제의 핑계가 되는 걸 우리는 묵묵히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며 또 한번 모이려고 합니다.

발전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발전소 폐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방식의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종고용 보장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전노동자들과 시민들은 2022년부터 충남과 경남,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 발전노동자 행진과 기후파업을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지난해에도 발전소 폐쇄 지역을 중심으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를 함께 외쳐왔습니다.

이 자리들은 발전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삶의 존엄을 지키려는 다양한 이들이 함께 넓혀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빈곤의 부정의를 폭로하는 쪽방 주민들, 이동과 돌봄, 삶의 권리를 이야기 해온 장애/여성,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이들이 기후위기 시대 누구도 홀로 남겨져선 안 된다는 요구로 나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존엄을 함께 지켜내는 전환이어야 하기에, 우리는 재생에너지의 민영화를 막으며 에너지 공공성을 지키는 이 투쟁에 함께합니다.

올해도 그 싸움을 우리는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는 6월 13일, 우리, 폐쇄를 앞둔 하동발전소 지역에 다시 모입니다. 국가와 발전 5사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하며, 에너지 전환의 방향과 계획을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속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발전노동자들의 싸움이 노동자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바라는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싸움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위기를 이유로 하동발전소 폐쇄가 한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근래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공급'은 많은 경우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는 이제 산업 구조와 우리의 삶 전체가 연결된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에너지가 우리 모두의 삶과 존엄을 위해 생산되고 분배되어야 한다고 함께 외쳐야 합니다. 발전노동자들이 앞장서는 이 정의로운 전환 투쟁에서 그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6월 13일, 창원으로 모입니다. 곧 전국 곳곳에서 하동으로 향하는 버스를 조직할 예정입니다. 많은 연대와 참여로 함께해주세요.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이 투쟁에 함께합니다. 투쟁!

○ 주최·주관 단위 발언: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

정의로운 전환이 쟁취되는 그날까지 24만 공공운수노동자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수석위원장 고기석입니다.

다음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영향력이 더 큼니다. 국제 정세에 따른 경제 위기, 에너지 위기로 서민들의 삶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걸 챙겨 준다고 하니 귀가 솔깃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에너지 공급 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노동자 서민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당장 도움되는 지원,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상황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유가 상한제는 단기 처방일 뿐입니다. 유가 상한제로 정유회사에 지원할 돈으로 공공교통을 늘리는 근본적 정책에 투자해야 합니다.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하고 담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입니다. OECD 평균은 35%입니다. 3분의1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 와트를 달성한다고 해도 재생에너지 비중은 20% 밖에 안됩니다. 시민들은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해 더 빠르고 더 과감한 탄소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는 높은 석유 의존 사회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위해 통과시킨 추경 26조 중 재생에너지 관련 추경은 6천억에 불과합니다. 시급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자원입니다. 그나마 이 추경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입니다. 금융지원이라는 말은 결국 민간이 하는 시설 투자에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민간에게 맡긴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재생에너지의 90% 이상이 민간 발전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민영화 완성으로 연결될 판입니다. 집권여당은 추경으로 민생도 챙기고 에너지 대전환을 극복한다고 말하지만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현장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암울합니다. 발전노동자들은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석탄발전소 폐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발전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이 시작된지 20년이 됐고,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 외친지 이제 10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도 발전노동자의 상황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대행진에 나섭니다. 전국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경상남도도 모여서 정의로운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미래세대를 위해, 발전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쟁취하는 날까지 늘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최·주관 단위 발언: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 90% 이상을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로 늘어날 해상풍력은 94%가 민자사업이고, 그 중 상당은 외국 자본입니다. 바람과 태양은 모두의 것인데, 그 수익 대부분이 자본에게 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발전소는 문을 닫고, 빈자리를 속속 민간 자본이 채우고 있습니다. 올 6월 하동 1호기가 폐쇄되는데, 비정규직 협력사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동·삼천포 전체로 8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순차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예정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안이 국회에 10여 개 계류 중이지만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환의 이익은 자본이 독점하고, 전환의 비용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공재생에너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학교와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마을 태양광의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이익이 민간기업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발전 노동자의 총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노동당이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6월 13일 창원에서 노동당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최·주관 단위 발언: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녹색당 공동대표 이상현입니다.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구호를 볼 때마다 가슴 한 켠이 먹먹해집니다. ‘내 삶을 멈추지 말아달라’는 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절박한 요구 앞에, 국가라는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국가는 왜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있습니까.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며 세상에 빛을 공급해온 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 것입니까.

이미 너무 많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사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과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외주화와 폐쇄를 빌미로 자행된 인력감축은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죽

음의 문턱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임기 내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듯 폐쇄 ‘속도전’을 펼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한없이 느립니다. 작년 말 약속했던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은 여전히 제대로 된 밑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 또한 아무런 준비 없이 ‘발전소 폐쇄’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환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이미 분명한 대안이 있습니다. 정부가 마땅히 가야할 길은, 신규 핵발전소 건립이 아니라 신속한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반드시 공공 재생에너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회는 발전공기업을 통합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민간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생존을 위한 공공의 시스템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전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광장에서, 찬 바람 부는 거리에서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발걸음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노동자 시민이 손을 꼭 잡고 더 넓고 단단한 길을 열어갈 때입니다. 녹색당은 6월 13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기후정의버스를 타고 창원에 결집하겠습니다. 빛을 만드는 사람들의 삶이 벼랑 끝 어둠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불 밝히겠습니다.

전국의 시민 여러분,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주최·주관 단위 발언: 정의당 이호성 사무총장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방침을 밝혔을 때, 발전노조는 누구보다 먼저 나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에 애뜻한 마음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환영한다”는 발전노조의 성명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당시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수많은 지지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 9년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위험은 더욱 외주화되고 비극적인 사고만 반복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들 뒤 어렵게 만들어 낸 한전KPS의 직접고용 합의안은 이를 이행하기위한 협의체조차 꾸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합의한 약속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공공재생에너지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로드맵을 제안해 왔습니다.

석탄발전은 멈춰도 노동자의 삶은 멈출 수 없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하고, 전환의 과정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발전노동자의 총고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환의 방법도, 노동자들의 의지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노동과 민주주의가 있는 에너지 전환이 완수될 때 까지 정의당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 주최·주관 단위 발언: 진보당 정주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자, 국제 유가가 출렁였습니다.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전기요금이 오르

고, 물가가 올랐습니다. 식품 가격이 오르고, 비료와 주사기, 혈액 팩 등의 품귀 현상 우려가 매번 나옵니다. 그 충격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파고드는 곳은 언제나 노동자와 서민의 삶입니다.

석탄과 가스에 의존하는 방식이 우리 사회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화석연료 기업이고 시민들의 일상은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것을 에너지 안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진짜 에너지안보이자 진짜 에너지 안전망, 누구도 저버리지 않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직접 요구해 왔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발전노동자 총고용보장. 그 요구를 입법으로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발전노동자 고용보장은 정부안에서 사라지고, 정부는 고용승계는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노무비가 중간에서 새는 것이 경영 자율성입니까.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계약을 새로 써야 하는 것이 경영 자율성입니까.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하다 죽어나가야 하는 것이 경영 자율성입니까.

그것은 자율성이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든 것도 정부입니다. 정부가 설계한 민간 위탁 구조 안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일 자리를 가져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보장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노동자와 서민의 삶부터 공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발전노동자의 총고용보장은 바로 그 첫 걸음입니다. 이제 다른 전환, 모두를 위한 에너지로 나아가자는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 시민대행진으로 함께 뚜벅뚜벅 걸어나갑시다.

진보당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장 발언: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은 발전5사 통합으로 시작된다.

안녕하십니까? 발전노조 위원장 제용순입니다. 투쟁

발전노조는 발전소 민영화 저지 투쟁에 앞장섰고 결국 민영화를 막아냈습니다. 그렇게 발전노동자들은 생활필수품인 전기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지금껏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기후 위기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발전노동자가 범죄자는 아니지만 노동자가 일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엄청난 탄소를 배출합니다. 발전노동자도 살고 싶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이 2017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벌써 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발전노동자의 총고용을 위한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2022년부터 투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61기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 이후 정부는 LNG 발전소와 양수발전소로 대체 건설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재생에너지에서는 민자발전소 투자를 외치며 민영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건설 투자의 90% 이상 민자발전소에 의해 이뤄지고 그중 60% 이상은 맥쿼리 같은 해외 투기자본입니다.

햇빛과 바람과 바다는 우리 모두의 자원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수익도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자발전소는 이익이 되면 투자하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먼저 빠져나갑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해상풍력에 투자한다고 했던 해외투기자본이 최근 투자 철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다가 큰수익이 안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니 사업을 철회합니다. 그러면서도 민자발전소는 수익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정부는 해외투기자본에 부여했던 사업권이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민자발전소에 부여했던 사업권을 당장 회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의 민영화를 우려하는 것은 민영화된 전력시장 때문입니다.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했습니다. 폭등한 국제유가로 인해 최근까지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가 60조 원의 적자를 떠안았습니다. 반대로 민자발전소는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챙겼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베푼 우회적 민영화의 결과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되지 않고 공기업이 모든 적자를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공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전력시장에서 민자발전소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만큼 국민은 손해를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에서도 민자발전소는 공기업 건설비보다 적게는 1.5배에서 2배까지 늘어납니다. 늘어난 비용도 모두 시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공공 재생에너지 건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발전5사를 통합해서 공공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후 위기를 막고 발전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발전노조는 투쟁할 것입니다. 올해는 6월 13일 창원에서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장 발언: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대안분회장

반갑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한전KPS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정철희입니다.

발전소 노동자 김충현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차가운 공작기계 틈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정부는 무엇이라 약속했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합의를 이행하기는커녕 논의 자체를 회피하며 우리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소 현장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서 비열한 '인력 퇴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청인 공기업 한전KPS는 어떻습니까? 발전소 폐쇄 시기에 맞춰 책임져야 할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진행되어야 할 노사전협의체마저 거부하며, 우리를 현장 밖으로 밀어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짜 도급, 가짜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김충현 협의체의 합의를 이행하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온 원청이 우리를 직접 고용하십시오! 그것만이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해고의 외주화'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석탄화력발전소가 멈추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대안이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에너지 민영화여서 안 됩니다. 이윤 중심의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에 노동자의 삶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수십 년간 화력발전소를 지켜온 숙련된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의 핵심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총고용 보장'이자, 에너지 공공성을 지키는 진짜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우리는 쓰다 버릴 부품이 아닙니다. 발전소의 주인이며,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주체입니다.

오는 6월 13일 창원 대행진에서 우리의 분노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김충현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노동자를 지우려는 공기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합니다. 저 역시 법정과 현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노동자의 존엄이 살아 숨 쉬는 공공의 일터를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발전소의 불은 꺼져도, 노동자의 삶과 투쟁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투쟁!

[붙임 3: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기획안]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1) 취지와 배경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음. 2025년 말 태안 1호기에 이어, 하동 1호기 등부터 폐쇄 일정에 올라있음. 그러나 정부와 발전 공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확충도, 에너지산업의 공공성 유지·강화도, 발전 노동자 고용도, 지역사회 보전도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음.
-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하에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의 신속한 확대로 귀결되어야 함을 제기해왔음. 이러한 공감대 속에 2025년에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입법청원이 성사되었으며, 올 초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음.
- 폐쇄와 전환의 결정과 방향 설정, 진행 과정까지 노동자와 시민사회, 지역 공동체 등의 주도적인 참여야말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의 출발점이지만,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참여는 배제되고 있으며, “전환 지원”이라는 말로 부분적, 사후적, 수동적 지원책만이 일부 제시되고 있을 뿐.
-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문제는 사실상 한 산업 부문이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첫 번째 사례. 여타 산업은 물론 향후 전개될 전환의 방식과 내용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이에 대한 총노동과 시민사회, 기후운동 전반의 대응이 필요함.
- 지난 2022년 이래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노동자 행진, 기후 파업 등이 진행되고, 2025년에는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으로 역시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경남 지역과 동시에 진행되었음.
- 정의로운 전환 행진의 성과를 잇고, 경남 하동 1호기가 폐쇄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을 전국 집중으로 2026년 6월 경남 지역에서 추진함으로써,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이라는 노동자, 지역사회, 기후운동의 요구를 전면화하고 이를 위한 연대와 실천을 결의함.

2) 개요

- 명칭: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 일시와 장소: 6월 13일(토) 15:00, 경남 창원시청 최윤덕동상 앞
- 사전행사 14:00, 행진 16시
- 공동주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 주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 조직화:

- 전국 창원 집중으로 진행
 - 민주노총 방침: 경남본부/공공운수노조 확대간부, 여타 지역본부 전임간부 참여
- 기후정의버스: 기후운동연대체, 지역 주체(지역 단체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창원으로 향하는 기후정의버스가 조직되고 있음.

3) 주요 요구

-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를 끝내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 발전소 폐쇄, 발전소노동자 총고용 보장하라!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4법* 즉각 제·개정 하라!
- 고 김충현 협의체 합의 이행과 한전KPS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 기후위기, 전쟁위기로 심화되는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라!
- 노동자·시민 참여 가)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하라!

* 공공재생에너지법, 정의로운 탈석탄법, 한국발전공사법 제정,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전면 개정

4) 프로그램(안)

- 일시: 2026년 6월 13일(토) 15시 / 사전 행사 14시
- 장소: 창원시청 최윤덕동상 앞 (행진 16시~16시40분, 마무리대회 창원분수광장(16시40분~16시50분))
- 대행진 프로그램(사회: 조창중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

시간		내용	비고
15:00~15:03		민중의례	사회자
15:03~15:07	소개	참가자 소개 및 구호	언론 포토타임 포함
15:07~15:12	공동대회사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 기후 단체 대표 1인	
15:12~15:16	투쟁사	공공재생에너지	공공운수노조
15:16~15:20	현장발언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발전 현장(하동)
15:20~15:30	문화공연		
15:30~15:34	기후버스	기후정의버스 참가자 소개	지역 기후정의버스 참가자
15:34~15:38	기후버스	기후 정의	기후 버스 대표 발언
15:38~15:42	투쟁사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발전 현장(충남)
15:42~15:53	기후버스	문화공연	
15:53~15:57	준비	준비 및 출발	
15:57~16:00	행진 출발	최윤덕 동상 ▶ 창원시청로터리 및 은아아파트 ▶ 상남분수광장	
15:40~	마무리집회	도착 및 마무리 발언	
16:50~			

- 행진(방송차량 2대)
 - 코스 : 최윤덕 동상 ▶ 창원시청로터리 및 은아아파트 ▶ 상남분수광장
 - 행진 순서 : 방송차 ▶ 현수막 ▶ 대오
- 마무리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에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총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붙임 5: 6.13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 서울 기후정의버스 안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충고용 보장!

문의 : 서울조직팀 조건희
010-6642-2123

서울 참가 버스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출발시간 및 장소
오전 8시 / 사당역 공영주차장

복귀시간 및 장소
오후 10시(예상) / 출발과 동일

참가비
2만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해고자 면제)

신청링크

bit.ly/613서울버스

공동주관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민주노총서울본부

[함께갑시다!]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참가단 (서울)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충고용 보장!

6월 13일, 함께 버스를 타고 창원으로 갑시다.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소 폐쇄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발전소의 노동자를 위한 대책에도,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2025년,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시민이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입법 청원을 성사하고 발의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이를 실현해낼 구체적 투쟁의 현장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하동발전소라는 구체적 현장에 투쟁을 열어냅시다.

—창원으로 가는 정의로운전환 서울버스 일정 안내—

🚌 출발 시간 및 장소: 2026.6.13(토) 오전 8시, 사당역 1번출구 공영주차장

🚌 복귀 시간 및 장소: 2026.6.13(토) 오후 10시(예상), 장소는 위와 동일

* 점심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참가비: 20,000원 / 하나은행 158-910017-66104(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참가비 면제(노조 기납부하였음)

* 해고자 참가비 면제

💖 신청마감: ~ 6/10(수)

💖 관련문의: 010-6642-2123 (서울조직팀 조건희)

🌐 613서울버스 공동주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민주노총서울본부

🌐 주최: 613정의로운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